

『대만, 폐기물 처리법 2001 개정안 (신규 폐기물 관리, 재사용 관리 강화, 형사 처벌 강화 등)』 심층분석 보고서

2025. 07.

TBT 통보 여부	미통보	HS Code	전제품
통보국	대만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21,075,784 (2024)
작성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목 차]

1. 규제 개요	1
2. 개정 세부내용	2
3. 관련 법령 및 표준	7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25.05.29., 대만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 강화와 불법 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저지를 위해 폐기물 처리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공고를 발표
- (규제요지) 동 규제는 폐기물의 제거와 처리, 재활용 및 불법 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등을 종합한 폐기물 관리 체계 수립을 제안함

TBT 통보번호	-	통보일	-
		고시일	2025.05.29.
규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처리법 2001 - 개정안 - (신규 폐기물 관리, 재사용 관리 강화, 형사 처벌 강화 등) 공고안 제1146110111A호, 2025년 5월 Waste Disposal Act 2001 - Proposed Amendment - (on managing emerging wastes, strengthening reuse management, increasing criminal penalties, etc.) Draft Announcement No. 1146110111A, May 2025 		
규제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만 환경부 Taiwanese Ministry of Environment 		
요구사항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호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제·개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 초안 		
채택일	-		
의견수렴 마감일	2025.07.28.		
발효일	-		
준수기한	-		

□ 적용범위 및 수출규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waste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의 제거와 처리에 적용 		
對발행국 수출액 (전년기준, 천불)	21,075,784	HS Code	전제품

□ (개정 세부내용)

- (주요내용) 동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책임 주체 범위 확대, 재활용 관리 강화, 불법 폐기물 단속을 골자로 관련 세무 조치를 추가하였음

[표 1] 주요 개정 조치

구분	주요 내용
책임 주체 범위 확대	회수 대상 폐기물의 공고 범위를 일반 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로 명확히 규정 - 기존에 태양광 패널 등 신형 폐기물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생산자 책임 제도로 관리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 - 생산자 책임 대상 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설치업자가 공동으로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책임 부담
재활용 관리 강화	재활용 권한의 일원화 : - 기존 각 부처별로 정한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관리 방법을 통합하여, 환경부가 단일 창구로서 총괄 관리하게 되며, 관련 업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부여 재활용 과정의 관리 강화: - 재활용 제품의 품질관리 및 인증·검증 체계 구축 - 유통 경로 추적 및 사용자 환경 모니터링 체계 마련 - 폐기물 발생 사업장, 재활용업체, 재가공 제조업체 및 최종 사용자를 포괄적으로 관리 - 경쟁력이 부족한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물 발생원에게 비용을 부과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며, 그 재원을 자원회수관리기금에 특별계정으로 편성·운용
불법 폐기 단속	건설 잔여 토석류의 전 유통 경로 관리 메커니즘을 새롭게 추가 - 중앙 주관 기관이 지정한 건설 잔여 토석류 시공업체, 운반업체, 수용 및 처리시설 등의 의무사항 : 1) 관련 정보를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함 2) 운반 장비에는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함 강화 조치: - 전자 울타리(Geo-fencing)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단속 도입 - 환경피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채권 보전을 사전 가중 책임 회피 방지 - 처벌 요건을 기존 "환경 오염을 야기한 경우"에서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변경하여 형량 및 벌금 상한 인상 - 농지나 환경 민감지역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 - 회사 대표자, 지배회사 또는 대주주에게도 폐기물 정리 및 환경개선의 연대 책임을 부과하여, 불법 업자의 자산 은닉이나 책임 회피를 방지

- 건설 잔여 토석류 및 태양광 패널 등 재생 에너지 설비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된 규정은 다음과 같음

[표 2] 신설 조항 내용

구분	신설 내용
건설 잔여 토석류 관리	<p>제10조의1</p> <p>건설 잔여 토석류 중앙 주관 기관은 불법 투기에 따른 환경 훼손 및 오염을 방지하고, 건설 잔여 토석류의 발생, 운반, 최종 처리 전 과정을 추적 가능하게 하기 위해, 건설 현장의 시공업체, 운반업체, 수용·처리 장소를 포함하는 전 유통 경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p> <p>건설 잔여 토석류 중앙 주관 기관이 지정하여 공고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시공업체, 운반업체 및 수용·처리 장소는, 건설 잔여 토석류를 운반, 처리 또는 재활용할 경우, 공고된 일정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전송 방식으로, 건설 잔여 토석류 중앙 주관 기관에 해당 토석류의 발생지, 종류, 수량 및 유통 경로를 신고할 것 - 중앙 주관 기관이 지정·공고한 건설 잔여 토석류 청소 장비에는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설치하고, 검사를 통과하고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함 <p>전항의 온라인 신고 형식, 항목, 내용, 빈도 및 실시간 추적 시스템 장비의 사양, 검사, 운용 방식, 관리 및 기타 준수 사항은, 건설 잔여 토석류 중앙 주관 기관이 따로 정함</p> <p>건설 잔여 토석류 주관 기관 또는 공사의 주관 기관은 제1항의 전 유통 경로 관리를 집행하기 위해,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시공업체, 운반업체, 수용·처리 장소 및 청소 장비에 대해 단속, 점검, 시료 채취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p>
	<p>제10조의2</p> <p>주관 기관은 폐기물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환경 오염 또는 위해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폐기물의 처리, 매립, 적치, 재활용 또는 처리 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도로 또는 기타 공공장소에 대해, 직접 또는 관계 기관(단체)과 협조하여 감시 촬영 시스템 및 기타 과학기술 수단을 설치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p> <p>주관 기관, 집행 기관 또는 목적 사업 주관 기관은 본 법에 따라 검사, 시료 채취 및 사실 확인을 수행할 때,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p> <p>전항 및 전전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도난, 변조, 손상, 소실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시행해야 함</p> <p>또한 개인정보 파일의 보안 유지 항목, 관리 체계, 필요한 조치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은 중앙 주관 기관이 따로 정함</p>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폐기물 처리에	<p>제16조의1</p> <p>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그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을 제조자, 수입자 또는 설비 설치자가 회수, 청소, 처리할 책임을 짐</p> <p>전항의 회수·청소·처리 책임업자 범위는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함</p> <p>전항에서 공고된 책임업자는 주관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다음에 따라 중앙</p>

구분	신설 내용						
대한 생산자 책임제도 명문화	주관기관이 승인한 요율의 회수·청소·처리비용을 납부해야 함						
	<table><tr><td>설비 설치자</td><td>해당 기간의 구매량</td></tr><tr><td>제조업자</td><td>해당 기간의 영업량에서 설치자의 판매량을 공제한 수량</td></tr><tr><td>수입업자</td><td>세관에 신고한 수입량에서 해당 기간 설치자의 판매량을 공제한 수량</td></tr></table>	설비 설치자	해당 기간의 구매량	제조업자	해당 기간의 영업량에서 설치자의 판매량을 공제한 수량	수입업자	세관에 신고한 수입량에서 해당 기간 설치자의 판매량을 공제한 수량
	설비 설치자	해당 기간의 구매량					
	제조업자	해당 기간의 영업량에서 설치자의 판매량을 공제한 수량					
	수입업자	세관에 신고한 수입량에서 해당 기간 설치자의 판매량을 공제한 수량					
	이 비용은 자원회수관리기금으로 사용하고,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여야 함						
	전조 제1항 및 본조 전항의 책임업자가 등록, 신고, 납부하는 방식, 절차, 기한, 공제, 환급 및 기타 준수사항에 관한 관리방법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함						
	전조 제1항 및 본조 제3항의 요율은, 중앙주관기관이 설치한 자원회수요율심의회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이를 중앙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공고함:						
	재질, 용적, 중량, 환경에 대한 영향, 재활용 가치, 회수·청소·처리 비용, 회수·청소·처리율, 징수 비용, 기금 재정 상황, 회수 보상금 액수 및 기타 관련 요소						
	제16조의2						
사업 운영, 생산 또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자원 순환 이용의 필요성이 있고, 회수 및 재활용이 시장 경쟁력이 부족하여 심각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주관기관은 이를 회수 대상 폐기물로 공고할 수 있음							
전항의 회수 대상 폐기물의 배출원 사업 범위는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함							
전항에 따라 공고된 배출원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신고하고, 중앙주관기관이 승인한 요율에 따라 회수·수거·처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자원회수관리기금으로 사용됨							
해당 요율은 자원회수요율심의회가 폐기물의 재활용 가치, 환경에 대한 영향, 징수 비용, 기금 재정 상태 및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중앙주관기관의 승인 후 공고함							
제1항의 회수 대상 폐기물이 재활용되어 재활용 제품이 생산된 경우, 그 사용자는 자원회수관리기금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그 사용량은 인증기관의 감사·인증을 거쳐, 자원회수관리기금의 심사를 통해 보조금이 지급됨							
제3항의 책임업자의 납부 방식, 절차, 기한, 공제, 환급, 감면 또는 면제, 그리고 전항의 재활용 제품 사용자에게 대한 보조금 신청, 감사·인증, 심사, 보조금 중지, 관리 및 기타 준수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함							

-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 또는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 처벌 강화 주요 개정 개요

처벌 조항	비고
<p>제46조</p> <p>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신타이완화 1,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p> <p>- 유해한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투기한 자</p>	<p>개정 전 관련 내용:</p> <p>- 5년</p>

처벌 조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책임자 또는 관련자가 본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폐기물을 저장, 수거, 처리 또는 재활용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주관 기관의 허가 없이,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적치한 경우 -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방식 또는 허가 문서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저장, 수거, 처리 또는 재활용하여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제39조 제2항 제2호 제2목 또는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문서를 취득하지 않고, 폐기물을 수거, 처리 또는 재활용한 경우 <p><u>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신타이완화 1,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기관의 직원이 불법 폐기물 수거·처리·재활용 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그 위탁자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탁한 경우 - 공·사립 폐기물 처리기관, 공동처리기관, 재활용기관, 또는 제28조 제1항 제3호 제3목부터 제6목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의 책임자나 관련자, 또는 집행기관의 직원이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을 하지 않고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p><u>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농지 생태, 자원 이용에 민감한 환경 민감 지역에서의 투기, 오염, 매립 또는 적치일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신타이완화 2,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시킨 경우 - 밑줄 부분 신설
<p>제49조의1</p> <p>시공업체, 운반업체 또는 수용·처리 장소가 제10조의1 제3항에 따라 정해진 관리방법 중, 온라인 신고 방식, 실시간 추적 시스템의 사양, 심사, 운용 또는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건설 잔여 토석류의 지방 주관 기관은 신타이완화 6,000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시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반복 처벌할 수 있다.</p> <p>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공사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p> <p>전항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 상황은 건설 잔여 토석류 중앙 주관 기관이 공고한다.</p> <p>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1 제4항에 따른 단속, 검사, 시료 채취 또는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회피하거나,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건설 잔여 토석류의 지방 주관 기관이 신타이완화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p>제50조</p> <p>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타이완화 1,200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시한까지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복하여 처벌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천 이하

처벌 조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27조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 <p>전항 제3호에 따른 처벌 대상은 행위자(위반 행위자)로 함 단, 동력차량을 사용하여 제27조 제1호,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차량 소유자가 처분 전에 관련 증거와 실제 책임자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처분 기관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차량 소유자를 처벌 대상으로 간주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관련 법령 및 표준

- 폐기물처리법(2017년 6월14일)